

## 동반성장의 철학적 기초

정운찬

(동반성장연구소 이사장, 서울대 명예교수)

김자봉

(한국금융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주병기

(서울대 경제학부 교수)

## I. 들어가는 말

이 글의 목적은 동반성장의 철학적 기초를 논의하는 데 있다. 이를 위해 애로우 교수의 현문으로부터 시작하여 정운찬의 동반성장에 대한 정의를 살펴본 다음, 아담 스미스의 도덕철학, 롤즈의 정의론 및 최근 ESG의 사회책임에 대한 논의를 정리해 보고자 한다. 이러한 논의로부터 얻고자 하는 바는 두 가지이다. 하나는 아담 스미스로부터 비롯된 경제학의 시작에서부터 사회선택이론 및 최근의 사회책임에 대한 논의에 이르기까지 경제학에서 중요한 지위를 차지하는 논의들이 가리키는 동일한 방향이 동반성장이라는 점이다. 다른 하나는 동반성장에 대한 논의를 통해 그간 우리 사회 시스템을 지배하고 있는 경제성장과 소득분배에 대한 이분법과 self-interest에 대한 경제학의 집착이 잘못된 편향이자 도그마에 불과할 수 있다는 점을 이해하는 것이다.

흔히 현실의 경제활동에서는 technical economics 관점의 어떻게 경제성장을 이룰 것인가라는 질문이 관심의 대상이 된다. 하지만 그에 못지 않거나 혹은 더 큰 중요성을 갖는 것은 philosophical economics 관점의 왜 우리는 경제성장을 원하는가이다. 나 자신만을 위해서인가 아니면 나 자신과 내가 몸을 담고 있는 사회를 함께 위해서인가. 1972년 노벨경제학상을 받은 Kenneth Arrow(1974)<sup>1)</sup> 교수는 이렇게 묻는다: 만일 내가 나를 위하지 않는다면 누가 나를 위하겠는가? 하지만 내가 남을 위하지 않고 나만을 위한다면 나는 누구인가?<sup>2)</sup> 나는 누구인가는 진지한 종교적 사유에서도 철학적 사유에서도 궁극의 지위를 갖는 질문이다. 애로우 교수에 의하면 경제학은 개인과 사회의 조화를 위한 합리적인 선택을 찾는 사회철학이다. 나를 위해 사회를 무시하거나 사회를 위해 나를 희생하는 극단을 배제하고 나와 사회가 조화를 이뤄 동반성장을 할 수 있는 중립지역(middle realm)이 경제학이 찾아 나서야 하는 탐구의 대상이다.

애로우 교수에 의하면, 두 개의 중요한 기관이 이 중립지역을 구성한다. 하나는 가격 메커니즘(price mechanism)이고 다른 하나는 도덕원칙(the principles of ethics and morality)<sup>3)</sup>이다. 그런데 가격 메커니즘은 개인의 선호를 반영하지만 개인의 선호에 따른 선택이 사회에 미치는 영향은 고려하지 않는다. 각자의 선택이 사회와 자연환경 등에 부정적 외부성을 초래하더라도 이 외부성은 가격에 의한 거래의 대상이 되지 못하고, 이러한 부정적 외부성을 바로 잡아 줄 긍정적 외부성을 낳는 양심(conscience)도 가격에 의한 거래의 대상이 되지 못한다. 이에 따라 개인의 욕망과 사회적 가치는 필연적으로 충돌을 피하지 못한다.<sup>4)</sup>

애로우 교수의 불가능성 정리(impossibility theorem)<sup>5)</sup>의 핵심도 가격기능이 실패하는 상황에

---

1) Kenneth Arrow, The limits of organizations, Fels Lecture of Nobel laureate, Norton (1974).

2) If I am not for myself, then who is for me? And if I am not for others, then who am I? And if not now, when? Arrow(1974). 위 책, 1면.

3) Arrow(1974). 위 책, 26면

4) Arrow(1974). 위 책, 22-24, 27면. 이는 시장 메커니즘이 개인적 선호는 반영하지만 사회적 가치는 반영하지 못하는 데 따른 문제점에 해당하며, 개인의 소비선택에서 뿐 아니라 기업의 생산활동에 있어서 사회적 비용과 사적 비용이 분리되는 것도 같은 문제점이다. Kenneth Arrow, Social Choice and Individual Values, 2nd ed. Yale (1963). 18면.

5) Arrow(1963), 위 책.

서 각 개인의 선호만으로는 바람직한 사회적 선택을 도출할 수 없다는 점이다. 각자의 선택이 초래하는 부정적 외부성이 제대로 반영되지 않는 사회 시스템으로는 참다운 사회적 선택을 찾는 데 한계를 피할 수 없다. 나 자신의 선호만으로 사회적으로 가장 바람직한 선택을 하는 것은 사회적으로 가장 바람직하지 못한 결정에 이르는 패러독스에 빠질 수 있다. 따라서 개인과 사회가 조화를 이루는 사회적 선택이 가능하기 위해서는 나 자신의 선호뿐 아니라 나의 선택이 타인에게 미치는 영향을 함께 고려하는 것이 필요하다.<sup>6)</sup>

애로우 교수는 시장의 실패를 보완하기 위해서는 사회적 책임(social responsibility)을 제도화하는 것이 필요하며<sup>7)</sup> 이것이 바로 도덕원칙을 구현하는 것이다. 애로우 교수는 도덕원칙을 보이지 않는 기관(invisible institution)이라고 부른다. 이것은 뒤에서 논의하는 아담 스미스의 보이지 않는 손과 같은 의미다. 도덕원칙은 시장경제의 기본적인 딜레마(fundamental dilemma) 즉, 효율성과 분배적 정의(distributive justice) 간의 충돌을 해결하는 데 기여한다. 기본적 딜레마를 해결함에 있어서 도덕원칙이 추구하는 방향은 사회 구성원들로 하여금 상호발전을 추구하는 인간적 관계를 회복하도록 하는 것이며, 이러한 도덕원칙의 구현을 위해서는 시장의 한계를 보완하는 정부가 필요하다. 시장의 한계는 시장과 가격이 이기심에 지배된다는 점으로부터 비롯되고, 정부의 역할이 기대되는 이유는 정부가 이타심(altruistic interest)을 실천하는 주체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sup>8)</sup> 애로우 교수는 경제가 실패한 여러 사회의 공통된 특징의 하나는 상호신뢰의 부족(lack of mutual trust)이라는 문제점을 갖는다고 지적한다.<sup>9)</sup>

1998년 노벨경제학상을 받은 Amartya Sen의 Rational Fools(1977)<sup>10)</sup>에 의하면, 이기심을 경제학의 제1원칙으로 간주하는 경제이론은 이기심에 기반한 선호체계를 합리적이라고 부르고, 그렇지 못하는 것을 비합리적이라고 부르는데, 이와같이 보편적 도덕원칙(universalized moral system)으로부터 자신을 분리시키는 이러한 이론은 궁극적으로 합리적 바보에 다름 아닌 것이 될 수 있다.<sup>11)</sup>

현재 한국경제는 어려운 구조적 문제에 직면해 있다. 장기성장률은 하락하고 소득분배는 더욱 악화되고 있다. 더 나아가 교육의 창조적 인재 육성은 실패하고, 대·중소기업 양극화,

6) Arrow(1974). 위 책, 25면; Arrow(1963). 위 책, 21면.

7) Given that prices do not work completely, we have to consider to some extent social responsibility. Arrow(1974). 위 책, 27면.

8) interpersonal relationship for mutual improvements. Arrow(1974). 위 책, 18면; Some of the conflict, to be sure, is mitigated by the essential human feeling of sympathy. 같은 책, 25면; The fact that we cannot mediate all our responsibilities to others through prices, through paying for them, makes it essential in the running of society that we have what might be called "conscience," a feeling of responsibility for the effect of one's actions on others. 같은 책, 27면.

9) Arrow(1974). 위 책, 26면

10) Amartya Sen, Rational Fools: A critique of the behavioral foundations of economic theory, Philosophy and Public Affairs, Vol. 6(4) (1977). pp. 317-344; Philosophy and Economic Theory, edited by Frank Hahn and Martin Hollis, Oxford Univ. Press (1979).

11) 센 교수에 따르면, 합리적 바보가 되지 않기 위해서는 나 자신과 모두를 연결하는 공동체에 눈을 돌려야 한다(Groups intermediate between oneself and all such as community). Sen (1977), 위 글, 344면. '인간은 인간에 대해 늑대다'라는 전제 하에 스스로의 권리를 포기하고 지배받기를 의탁하는 홉스 방식의 사회계약이 합리적 바보의 중점이 될 수 있다. Thomas Hobbes, Leviathan: The matter, forme, and power of commonwealth ecclesiasticall and civil (1651).

공동체 정신의 약화 등이 나타났다. 이외에도 갑을 문제, 남북문제, 지역간 문제, 노사 문제, 세대간 문제, 남녀 문제 등도 심각한 수준에 이르고 있다.

이러한 구조적 문제점은 이미 우리 사회가 지속 가능한 경제성장을 이루게 하는 조건으로부터 크게 벗어나 있음을 드러낸다. 그런데 이러한 구조적 문제는 왜 생겨나는가? 왜 경제가 성장함에도 불구하고 지속가능성이 위협받게 되는가?

애로우 교수의 견해로부터 유추하면, 현재 한국경제가 직면하고 있는 구조적 문제의 원인은 우리의 시스템이 시장의 실패를 보완하는 사회적 책임을 제도화하지 못하였기 때문이다. 간단한 예로, 성장과 분배는 둘이 아니라는 경제학계의 오랜 결론에도 불구하고 우리 사회에서는 여전히 성장과 분배는 충돌하는 것으로 이해되고 화해에 이르지 못하고 있다. 성장론자는 분배악화를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이고 분배론자는 성장의 감소를 감수해야 분배가 가능한 것으로 여긴다.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의 관계도 경쟁적이고 공정할수록 경제에 긍정적 효과를 낼 수 있는데, 국내에서는 기술탈취 등 부정경쟁이 만연하는 동물원이라고 비유될 정도로 서로 상생적 관계를 구축하지 못한 지 오래되었다. 제로섬 게임이라고 불리는 정치영역과는 달리 윈윈게임이라고 불리는 경제영역이 실제로는 제로섬 게임에 사로잡혀 있는 것이다.

우리 경제의 구조적 문제는 동반성장에 대한 이해와 이를 실현하기 위한 동반적 관계의 구축을 통해 해결될 수 있다. 왜 동반성장이 필요하고, 어떻게 하면 동반성장을 이룰 수 있는가? 이 물음 아래 동반성장의 철학적 기초에 대한 논의와 함께, 동반성장의 경제정책에 대한 논의를 심도 있게 해야 한다. 다만 이 글은 동반자적 관계를 통한 성장방식과 소득분배의 개선, 대·중소기업간의 상생적 생태계 구축을 위한 방안 도출의 긴급한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정책방안의 도출에 앞서 동반성장의 중요성에 대한 이해를 높이기 위해 철학적 기초를 논의하고자 한다.

Bertrand Russell(1912)<sup>12)</sup>에 의하면, 철학은 왜라고 묻고 답을 구하는 것이다. 도그마에 의해 지배되지 않고 왜라는 질문을 던짐으로써 의심받지 않은 잘못된 지식(unsuspected possibilities about matters of fact)의 빗장을 열어 오류를 해소(freedom from narrow and personal aims)하는 것이 철학의 역할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동반성장은 그 자체가 우리 사회를 지배하고 있는 경제성장과 소득분배에 대한 기존의 이분법적 도그마와 편향에 대한 철학적 도전이다. 수학과 경제학을 비롯한 학문의 역사도 기존의 도그마로부터는 허용되지 않던 왜라는 질문으로부터 시작되었다. 성장과 분배의 공존을 허용하지 않는 기존의 사회 시스템과 self-interest에 대한 경제학의 집착이라는 도그마에 대해, 동반성장은 왜라고 묻고 의심받지 않던 오류의 가능성에 도전한다.

이하 이 글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II 장은 동반성장에 대한 정의를 살펴보고, III 장은 Adam Smith의 도덕감정과 동반성장, IV 장은 공정한 사회계약, 정의로운 시장과 동반성장에 대해 살펴본다. V 장은 ESG(Environmental, Social and Governance)와 동반성장에 대하여 정리하고, VI 장은 동반성장의 의미와 맺음말을 담는다.

12) Bertrand Russell, Chapter 14: The Value of Philosophy, The Problems of Philosophy (1912)

## II. 정운찬(2021):<sup>13)</sup> 동반성장의 정의

### 1. 동반성장

정운찬(2021)에 의하면, 동반성장(Shared Growth)은 더불어 성장하고 함께 나누는 사회 철학이다. 인류 공동체를 구성하는 개인, 집단, 국가 사이를 동반자 관계로 조성하여, 공동체가 지속 가능하도록 운영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다. 이를 위해 동반성장은 어느 일방에게만 이익이 돌아가는 승자독식의 경쟁을 배제하고, 참여자 모두에게 정당한 몫이 돌아가는 협력적 경쟁을 추구한다.

동반성장이 주장하는 ‘함께 나누자’라는 것은 있는 사람의 것을 빼앗아 없는 사람에게 주자는 것이 아니다. ‘더불어 성장’을 통해 경제 전체의 파이를 크게 하고 성과에 비례하여 분배를 하되 소득불평등을 개선하는 분배의 규칙을 보완적으로 도입하자는 것이다. 예를 들어, 기존 한국의 GDP가 100이고 부자에게 80, 그리고 빈자에게 20이 분배되었다고 하자. 동반성장이 추구하는 것은 GDP를 100에서 예를 들면 110으로 키우되, 분배는 이전 규칙에 따라 ‘88 대 22’로 하지 말고 불평등이 조금이라도 개선될 수 있도록 새로운 규칙에 따라 ‘85 대 25’ 또는 ‘82 대 28’ 등으로 나누자는 것이다. 부자와 빈자 모두 다 성장의 과실을 얻게 하되 빈자의 증분(增分)이 부자의 증분보다 조금 더 크게 하자는 것이다.

동반성장이 자본주의에 위배된다는 반론이 있다. 자본주의는 이익 극대화를 보장해 주어야 하는데, 동반성장은 이익 극대화를 견제하자는 것이니 자본주의와 반대된다는 주장이다. 하지만 이것은 잘못된 오해다. 동반성장은 이익극대화를 부정하지 않는다. 엄밀히 말하면 동반성장은 승자독식의 이익 극대화를 견제한다. 이익을 마치 혼자서 노력해서 만든 것으로 여기고 독식하겠다는 것은 탐욕이다. 그것은 자본주의의 바람직한 참모습이 아니다. 예를 들어, 주주이익 극대화의 입장에서는 당장 기업의 주가를 높이고, 주주에게 배당금을 지급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겠지만, 기업 활동에 직간접으로 참여하는 사람은 주주만이 아니다. 근로자들도 있고 납품·협력업체들도 있으며, 고객도 있다. 주주의 이익뿐 아니라 이들의 이익이 모두 극대화되어야 비로소 기업의 가치도 극대화될 수 있다.

근로자거나 납품·협력업체, 고객의 이익을 희생해 가면서 그 회사의 이익이 극대화되는 일은 상상하기 어렵다. 설혹 단기간에 그런 일이 있을 수 있다 하더라도 오래가지는 못한다. 결국, 단기적 이익 극대화는 기업활동의 중요한 측면이긴 하지만, 그것을 기업목표 전부라고 생각하는 것은 근시안적 사고일 뿐이다.

한국의 자본주의는 사실 제대로 된 주주 중심주의도 아니다. 대주주 중심주의에 의해 지배되고 있다. 대주주의 이익 극대화를 유일한 기업목표로 간주하는 사고방식부터 버려야 한다. 이런 생각이 대기업들의 중소기업인들에 대한 부당한 관행을 정당화시켜주는 이론으로 악용되고 있다. 고객과 근로자, 협력업체에 성과가 합당하게 돌아가도록 하는 것이 한국의

---

13) 정운찬, 한국경제 동반성장 자본주의 정신, 파람북 (2021).

자본주의가 지향해야 할 새로운 모습이다.

동반성장은 그 개념이 매우 넓다. 대기업·중소기업 간 동반성장뿐 아니라, 빈부 간, 도농 간, 지역 간, 수도권·비수도권 간, 남녀 간, 국가 간 동반성장 등 매우 광범위한 개념이다. 예를 들어, 개성공단은 남북한 간 동반성장의 상징적 의미를 가지는 것이었고, 서울대학교가 입시제도로 채택하는 지역균형선발제는 지역 간 동반성장을 위한 고려다. FTA는 만병통치약은 아니지만, 국가 간 동반성장의 한 사례라고 할 수 있다.

## 2. 포용적 성장

포용적 성장은 동반성장과 유사한 개념이다. OECD에 의하면 포용적 성장은 성장의 과실이 공평하게 나뉘고 모두에게 기회가 제공되는 성장을 말한다.<sup>14)</sup> 부유한 국가에서도 남녀간 고용기회 및 임금에 차이를 보이고 상대적 빈곤은 주로 고령세대뿐 아니라 젊은 세대의 문제이기도 하다. 최근에는 젊은 세대의 상대적 빈곤이 점차 심화되고 있다. 이러한 상대적 빈곤과 사회적 소외는 글로벌화, 디지털화, 인구고령화 등과 함께 더욱 심화되는 모습을 보인다.

경제성장이 모든 사람들의 복지를 자연스럽게 증가시키지는 않는다. 기업의 역동성을 강화하고 생산성 증가에 비례하는 임금의 증가가 이루어지도록 해야 한다. 생산성 증가는 경제의 장기적 성장의 필요조건이지만 충분조건은 아니다. 소득불균형 문제를 해결하는 정책이 마련되지 않으면 생산성 증가만으로는 장기적이 성장이 보장되지 않는다. OECD의 포용적 성장 이니셔티브는 소득분포의 하위 40%의 처지를 개선하는 데 중점을 둔다. 경제성장의 편익이 보다 공평하게 분배되도록 보장하는 것이다. 이를 위한 세 가지 원칙은 다음과 같다. 첫째, 소외된 사람들과 지역에 투자해야 한다. 소외된 사람들의 어린이에 대한 조기교육, 건강보험, 주택 및 인프라에 대한 지원이 필요하다. 둘째, 기업의 역동성과 포용적 노동시장을 위한 지원이 필요하다. 혁신적 기술을 광범위하게 확산하고 여성과 저소득계층에 대한 좋은 직장 기회를 제공해야 한다. 셋째, 정부는 분배적 측면을 정책의 우선순위로 설정해야 한다.<sup>15)</sup> Digital tax를 도입하여 국가 간 공평과세가 이루어지도록 해야 한다. 국가간 조세 차이를 이용한 조세 회피를 억제해야 한다.<sup>16)</sup>

Acemoglu and Robinson(2011)의 『국가는 왜 실패하는가(Why Nations Fail)』에 의하면, 포용적 정치체제가 포용적 경제체제를 보장하고, 포용적 경제체제는 지속적인 성장을 가능하게 한다. 하지만 자유로운 시장(free market)이 곧 포용적 시장(inclusive market)은 아니다.

14) Inclusive growth is economic growth that is distributed fairly across society and creates opportunities for all. <https://www.oecd.org/inclusive-growth/#introduction>

15) OECD, The framework for policy action on inclusive growth. 2018.  
<https://www.oecd.org/mcm/2018/documents/C-MIN-2018-5-EN.pdf>

16) Inclusive growth is economic growth that is distributed fairly across society and creates opportunities for all.

<https://www.oecd.org/inclusive-growth/#introduction>

Business for Inclusive Growth.

<https://www.oecd.org/inclusive-growth/businessforinclusivegrowth/>

소수에게 경제권력이 집중된 상태에서의 자유로운 시장은 포용적이지 않다. 포용적 경제체제 하에서 지속적인 성장이 가능한 이유는 두 가지이다. 하나는 기술혁신이고 다른 하나는 교육이다. 기술발전은 노동, 토지, 자본 등 생산요소의 생산성을 높이고, 교육은 기술발전이 실제 경제활동에 응용되고 적응되도록 하는 과학적 지식을 가능하게 한다. 포용적 경제체제에게 필요한 역량은 포용적 시장(inclusive market), 기술혁신, 사람에 대한 투자, 재능과 기술의 활용 등이며, 이러한 역량이 경제성장의 요인이 된다.

### 3. 포용적 성장과 동반성장의 관계

포용적 성장과 동반성장은 공히 소득불평등의 해소를 목적으로 한다. 다만 포용적 성장은 분배의 결과를 개선하는 데 목적을 둔다. 이에 따라 포용적 성장은 경제성장의 결과로 소외된 사회적 그룹에 대해 사회적 배려를 제공하는 프로그램으로 이해할 수 있다. 사회적으로 더 경쟁력 있는 자가 경쟁력이 약한 자를 배려하는 것이 포용적 성장의 관점이다. 반면, 동반성장은 분배의 결과뿐 아니라 과정도 중시한다.

분배의 결과는 동반성장과 포용적 성장이 동일할 수 있다. 하지만 나누는 방법은 다르다. 포용적 성장에서는 새로운 분배가 정부의 추정에 기반한 외생적 개입에 따른 조세의 방식으로 이루어지는 반면, 동반성장은 동반자적 관계에 있는 자들 간에 이루어진 내생적 계약 혹은 분배규칙에 따라 새로운 분배가 이루어진다. 포용적 성장의 외생적 개입은 비자발적인 분배조정인 반면, 동반성장의 내생적 규칙은 자발적 판단에 의해 분배가 조정되거나 최소화된 국가 개입을 통해 조정된다. 개별 생산활동의 성과에 대하여 도덕적 설득에 기초한 자발적 조정을 우선으로 하며 필요시 세제지원이 유인으로서 제공될 수 있다.

포용적 성장이 갖는 개념적 불편함은 상대방을 약자로 전제하고 구태여 배풀지 않아도 되는 아량을 베푸는 식의 분배구조를 정당화할 수 있다는 점이다. 달리 말하면, 포용적 성장은 상대적 힘의 우위의 차이를 배경으로 한 분배질서를 전제로 한다. 하지만 동반성장은 경제활동 과정에서 각자의 역할과 중요성에 비례하여 적절한 분배구조가 적용되는 경제활동의 파트너로 인정한다.

동반성장의 철학적 기초의 가장 오랜 연원은 아담 스미스의 도덕철학이다. 또 빼놓을 수 없는 이론은 롤즈의 정의론과 최근 큰 관심의 대상이 되고 있는 ESG이다. 이미 앞서 살펴본 애로우의 도덕원칙과 보이지 않는 기관과 더불어 이들은 동반성장의 철학적 기초를 이루는 중요한 이론들이다. 이하에서는 먼저 아담 스미스의 도덕철학과 경제학을 먼저 살펴보고 그 다음으로 롤즈의 정의론 및 ESG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 III. Adam Smith의 도덕철학과 동반성장

역사적으로 사회작동원리는 구성원들의 행동을 비롯하여 정책·제도·법의 내용에 영향을 미쳐왔다. 중상주의는 국가의 부(富)가 금·은과 같은 귀금속을 축적하는 것에서 발생한다고 보고 생산과정보다는 유통과정을 중요하게 생각했다. 그래서 소수에게 특권을 주어 무역과 유통을 엄격하게 통제하고, 독점시장을 형성토록 했다. 이것이 중상주의 사회의 작동원리다.

중상주의 사회에서 태동한 자본주의 사회 작동원리의 핵심은 아담 스미스에서 찾을 수 있다. 아담 스미스는 『국부론』(*The Wealth of Nations*, 1776)에서 국부의 원천은 금과 은이 아니라 분업에 의해 전문성을 획득한 생산, 소비, 교환 등에 의해 실현된 부가가치라는 것을 밝혔다. 이에 따라 경제성장은 노동과 자본 등 생산요소 투입의 증가뿐 아니라 이들 요소의 생산성(productive power)의 증가에 의해 이루어지고 자본의 증가는 순저축(net saving)에 의해 가능해진다.

아담 스미스는 『도덕감정론』(*The Theory of Moral Sentiments*, 1759)에서 경제와 사회가 조화와 균형 속에서 발전하려면 세 가지 덕(virtue), 즉 현려, 정의, 인혜가 필요하다고 했다. ‘현려(賢慮, Prudence)’의 덕은 자신의 건강, 재산, 평판을 지키기 위한 신중한 노력을 추구하는 것으로 이 덕은 자기 이익을 추구하는 개인과 이들이 모인 시장에서 이루어진다. ‘정의(正義, Justice)’의 덕은 사회가 유지되고 공정하도록 하는 정부의 역할을 통하여 이루어지고, ‘인혜(仁惠, Beneficence)’의 덕은 타인의 필요를 기꺼이 돕고자 하는 사랑과 애정의 연대(agreeable bands of love and affection)에 의해 실현된다. 소외계층을 돕는 것은 인혜의 덕이다. 아담 스미스에 의하면 개인의 내면에는 ‘공정한 관찰자(Impartial Spectator)’가 존재한다. 이 공정한 존재는 인혜의 덕을 주관함으로써 각 개인이 자유롭게 경제활동을 하는 가운데에서도 자신의 경제적 이익을 사회의 도덕적 한계 내에서만 추구함으로써 스스로 자신의 무한 자유를 제어한다. 공정한 관찰자 역할을 확대하여 정부가 독점, 매점매석, 폭리 등의 불공정한 사태에 개입해 공정을 유지토록 하는 것을 ‘정의’의 덕이라 했다.

스미스는, ‘정의’는 경제사회의 기둥이며 ‘인혜’는 그 지붕이라고 보았다. 기둥이 무너지면 모든 것이 무너지고, 지붕이 부실하면 세찬 비바람을 피할 수 있는 안정된 생활이 위협받는다. 다시 말하면, 정의가 무너지면 한 사회가 유지될 수 없고, 인혜가 무너지면 사회가 즉시 무너지지는 않겠지만 변영할 수가 없고 행복할 수도 없는 가운데 소수의 사람과 상인에 의해 지배될 수 있다. 아담 스미스가 주장하는 자본주의 작동원리는 중상주의와 달리 ‘모든 개인이 자신의 이익을 시장에서 자유롭게 실현하는 것’과 ‘공정한 관찰자로서, 개인의 이기심과 탐욕 때문에 공동체 사회의 조화와 질서가 붕괴하지 않도록, 개인의 경제적 이익을 사회의 도덕적 한계 내에서 허용하는 것’이다.

아담 스미스 스스로가 언급했듯이 『도덕감정론』과 『국부론』은 큰 틀에서 한 권의 저작물이다.<sup>17)</sup> 『국부론』에 등장하는 경제주체는 『도덕감정론』에 등장하는 인간과 동일한 존재다. 따라서 『국부론』에 등장하는 보이지 않는 손은 『도덕감정론』의 현려, 인혜, 정의의 덕을 갖춘 우리 내면에 있는 공정한 관찰자의 손이고 이러한 세 덕의 주관으로 인해 각 개인의 선택은 공적 이익에 부합한다.<sup>18)</sup> 또한 국부의 궁극적인 원천은 각 개인의 전문화된

17) Andrew Skinner, Analytical Introduction, in Adam Smith, *The Wealth of Nations*, Penguin Classics (1999). 10면.

18) 도덕감정론의 첫 문장은 다음과 같다. However selfish man may be supposed, there are evidently some principles in his nature, which interest him in the fortune of other, and render their happiness necessary to him, though he derives nothing from it except the pleasure of seeing it. 이 문장에 따르면 ‘이기적 인간’의 정의가 그저 자신만을 생각하는 자는 아니다.



노동과 자본이며, 개인과 사회가 유기적으로 연결된 시스템 하에서 각 개인의 최선의 이익은 곧 최선의 국부가 된다.<sup>19)</sup>

『국부론』에 의하면, 정부는 비록 직접적으로 경제기능을 하지는 않으나 공정한 국가를 유지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국가가 민간의 경제활동을 관리하거나 공익에 부합하도록 고용 등을 지시할 필요는 없다. 하지만 국방과 사법(justice), 경제활동을 지원하는 인프라 건설, 교육 등의 공적 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 특히 독점은 국가의 적이다(Monopoly is a great enemy to good management). 독점은 공정하지 못한 배타적 특권(exclusive privilege)으로 자연적 자유(natural liberty)를 침해하고 시장의 효율적인 배분적 메커니즘(allocative mechanism)을 훼손한다. 따라서 독점을 금지하고 그 폐해를 엄밀히 규제해야 한다. 또한 국가는 각 개인이 사회적으로 바람직한 자유의 추구를 가능하도록 보장하는 경제적 시스템을 갖추어야 하며 이 시스템은 세 가지 덕에 부응하여야 한다. 더 나아가 국가는 분배적 차원에서는 어려운 처지의 시민들이 최저생계 수준을 유지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

아담 스미스가 이기심에 기반한 자유방임주의를 지지했다는 상식적 차원의 주장이 더러 있다. 이런 주장은 각 경제주체가 이기심에 따라 자기 이익을 추구하며 경제생활을 하면 ‘보이지 않는 손’에 인도되어 사회의 부를 극대화하는 결과를 가져오므로 국가개입을 없애야 한다고 한다. 각 개인은 자신에게 어떤 것이 이익이 되는지 가장 잘 알며, 자신의 이익만을 쫓더라도 보이지 않는 손에 의해 사회 전체의 이익이 증대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런 해석에는 아담 스미스의 주장에 대한 후대 경제학자들의 과장과 왜곡이 숨어있다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

아담 스미스의 경제철학에 따르면, 자본주의가 직면하는 경제위기의 본질은 지극히 철학적이다. 자본주의 경제 질서는 다양한 형태로 변화해 왔다. 그러나 두 가지(개인의 자유로운 경제활동, 공정한 관찰자에 의한 조정과 통제) 원리가 하나의 토대로 기능하는 자본주의 사회의 작동원리는 변함없이 지속되었다. 아담 스미스 시대의 고전적 자본주의는 개인의 공정한 관찰자 개념을 국가로 확대한 케인즈적 자본주의를 거쳐 개인의 자유로운 경쟁을 극대화한 신자유주의적 자본주의로 변화해 왔다. 그러나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로 신자유주의적 자본주의는 위기를 맞았다. 신자유주의적 자본주의가 위기를 맞은 것은 아담 스미스가 정립한 자본주의의 두 가지 사회작동원리 가운데 ‘공정한 관찰자에 의한 개인 이기심의 조정과 통제’를 배제하고, ‘개인의 자유로운 경쟁’만을 강조했기 때문이다. 분명 자유와 경쟁은 특권을 가진 소수만이 자유로운 경제활동을 했던 중상주의 경제 질서에서 모두가 자유롭게 경제활동을 하는 자본주의 시장경제로의 이행을 가져오는 촉발제가 되었다. 따라서 자유와 경쟁은 자본주의 발전의 자양분임이 틀림없다.

---

19) the annual revenue of every society is always precisely equal to the exchangeable value of the whole annual produce of its industry. As every individual, therefore, endeavours as much as he can both to employ his capital in support of domestick industry,...every individual necessarily labours to render the annual revenue of the society as great as he can. He generally, indeed, neither intends to promote the publick interest, nor knows how much he is promoting it. ..he intends only his own gain...led by an invisible hand to promote an end which was no part of his intention. Adam Smith, *The Wealth of Nations*, Oxford Univ. (1776. reprinted 1976). 456면.

그러나 ‘공정한 관찰자’의 덕목을 상실하고 ‘자유로운 경쟁’만이 남은 인간은 오직 이기적 욕망 충족만을 추구하기 때문에 공동체 사회는 무한경쟁의 각축장으로 전락한다. 따라서 신자유주의적 자본주의 사회에는 사회적 정의가 자리 잡을 여지가 없다. 능력주의와 실력주의란 명분으로 적자생존의 법칙이 인간사회에 관철되면서 오직 승자독식의 이윤추구만이 인간의 삶과 사회를 결정할 뿐이다. 그 결과는 경제적 불평등의 심화와 양극화였다.

#### IV. 공정한 사회계약, 정의로운 시장과 동반성장

자유롭고 합리적인 개인들이, 그들이 구성할 사회의 제도에 대하여 맺게 될 원초적 협의는 어떤 것인가? 사회계약론은 이러한 원초적 협의가 나타내는 사회계약에서 정부와 사회제도의 정당성의 토대를 찾는다. 토마스 홉스, 존 로크, 장자크 루소, 임마누엘 칸트 등 근대 정치철학과 윤리학의 전통에서 사회계약론의 영향은 지대했고 현대의 정치철학과 윤리학뿐만 아니라 정치학, 경제학, 사회학 등 사회과학으로까지 이어졌다.

아담 스미스의 도덕철학은 이런 사회계약론의 전통과는 구별된다. 그에게 도덕철학의 주요 과제는 인간의 도덕적 본성을 이해하는 것이다. 개개인들이 정의, 인혜, 그리고 현려의 덕을 ‘공정한 관찰자(impartial spectator)’의 양심에 따라 자율적으로 추구하는 사회에서 아담 스미스의 도덕적 이상이 실현된다. 사회계약론자들은 이렇게 질문할 것이다. 이런 사회가 과연 ‘사회전체의 이익을 증진하고 종[인류]의 번성을 도울’ (Smith, TMS) 것인가? 이 문제에 대한 답을 찾는 것이 그의 경제학의 과제였다.

아담 스미스가 경험했던 초기 자본주의와 그가 옹호했던 자유무역 질서 속에서 도덕적 본성이 조화를 이루는 도덕적 이상사회를 실현할 뿐만 아니라 사회전체의 이익과 인류의 번영이라는 (경제적) 합리적 결과도 달성할 수 있다는 것이 아담 스미스 경제학이 내리는 결론의 핵심이다. 따라서 불완전하지만 아담 스미스의 경제학이 사회계약론적인 관점에서 시장경제의 정당성을 어느 정도 설명한다고 볼 수 있다. 물론 아담 스미스의 시장경제가 자유롭고 합리적인 개인들이 합의하게 될 제도로써 완전하다는 답을 내릴 수는 없지만 말이다.

현대 경제학자들에게 정의와 공정은 경제를 구성하는 제도와 기본질서를 평가하는 가장 중요한 기준이다. 물론 다수의 경제학자들은 효율성도 마찬가지로 중요한 기준이라고 말하겠지만 효율성은 이제 설명할 사회계약론적 정의의 일면으로 볼 수 있다. 따라서 정의란 무엇인가는 경제학자들에게도 중요한 질문이 될 수밖에 없다.

아담 스미스의 도덕적 본성을 가진 개인들이 “공정한” 협상의 환경 속에서 합리적으로 선택한다면 어떤 정의의 원칙에 합의할 수 있을 것인가? 바로 이것이 경제학자 존 하사니와 당대의 경제이론가들이 제기했던 질문이었다. 아담 스미스가 말했듯이 공감의 본능을 통해 ‘공정한 관찰자’의 양심에 따라 판단하는 개인을 하사니는 ‘무지의 장막’이라는 불확실성 속에서 합리적으로 선택하는 경제주체로 나타냈다. 무지의 장막 속에서 사람들은 자신의 능력, 선호 등을 모를 뿐만 아니라, 자신을 포함한 구성원 어느 누구의 입장에 처할 가능성이 균등하게 주어진 불확실성에 처하게 된다. 이런 불확실성 속에서 이들이 공감 능력을 발휘하여 합리적으로 판단 한다면 어떤 원칙에 따라 사회적 협력의 성과가 배분될 것을 원하

겠는가? 하사니의 이른바 “공정한 관찰자 정리”에 따르면 그 답은 공리주의적 사회이익의 극대화이다. 공리주의적 사회이익은 구성원 개개인의 이익(효용)의 총합을 나타내고 이것을 극대화하는 것이 하사니의 정의의 원칙이다. 이는 경제적 효율성을 포괄할 뿐만 아니라 효율적인 자원배분에서 무엇이 가장 공정한가를 판단하는 기준이 될 수 있다.

공리주의와 함께 가장 대표적인 정의론을 제시한 존 롤즈(John Rawls)는 하사니와 유사한 질문에서 출발한다. 무지의 장막이라는 원초적 입장은 모든 사람들이 사회적 혹은 자연적 운으로부터 중립적이고 모든 사람들이 동등하게 합리적으로 판단하므로 공정한 협상의 환경이라 할 수 있다. 사회의 기본구조(시장경제와 같은 경제의 기본 질서, 사회적 성과의 배분, 기본권, 정치제도 등)를 지배하는 원칙에 대한 사회계약이 이런 공정한 환경 속에서 합리적 선택에 의해 합의될 수 있다면 바로 그렇게 합의된 원칙이 롤즈가 말하는 합당한 정의의 원칙이 되는 것이다.

하사니의 무지의 장막이 사람들의 선호를 지배하는 요인들에 대한 불확실성에 국한된 것에 비해 롤즈의 무지의 장막은, 성별, 인종, 사회적 지위 등 더 포괄적인 요인들에 대한 불확실성을 나타낸다. 하사니의 불확실성이 확률분포를 전제한 위험의 상황인 것에 반해 롤즈의 불확실성은 확률분포조차 알려져 있지 않을 뿐만 아니라 확률적 사고 자체가 어려운 훨씬 더 깊은 불확실성이다. 이러한 극도의 불안 속에서 합리적인 개인은 어떤 정의의 원칙을 선택하게 될 것인가? 과연 불평등을 허용하는 것이 합리적인 판단인가? 그렇다면 어느 경우 불평등이 허용될 수 있는가? 이런 질문에 답하는 것이 롤즈의 핵심과제이다.

이 질문에 답하기 위해 롤즈는 기본적인 권리와 자유의 문제와 사회경제적 지위에 대한 기회평등의 문제 그리고 사회적 성과 배분의 문제를 순차적으로 고려한다.

무지의 장막이라는 심오한 불확실성에 놓여있다면, 개인의 기본적인 권리와 자유, 그리고 사회적 위치, 역할, 혹은 지위에 대한 기회의 불평등은 어떤 경제적 편익으로도 보상될 수 없다는 것이 롤즈의 주장이다. 그 논거의 상당부분이 공리주의의 상반된 입장에 대한 비판에 의존하지만 충분한 설득력을 제공한다. 기본적 권리와 자유의 박탈 혹은 사회경제적으로 우월한 지위에 대한 기회의 박탈이 경제적 편익을 통해 보상될 수 있다고 보는 것이 공리주의의 가장 큰 문제점이라는 것이다. 롤즈에게 재벌과 대기업 집단의 경제력이 시장의 기회를 독점하고 중소기업과 창업자의 혁신과 성장의 기회를 박탈하는 것은 낙수효과를 통해 보상될 수 없는 기회불평등이라 할 수 있다. 이렇게 기본적인 권리와 자유는 모든 사람들에게 평등하게 보장되어야 한다는 원칙과 공정한 기회평등의 원칙이 이렇게 도출된다.

남은 문제는 구성원들이 협력을 통해 달성하는 사회적 성과의 배분에 대한 원칙을 찾는 것이다. 합리적인 사회계약(합의)이 합의하는 성과 배분의 원칙을 찾는 것이다. 롤즈의 원초적 입장이 나타내는 극도의 불확실성 하에서 합리적인 개인은 최악의 상황을 우선적으로 고려하는 극도의 불확실성(위험) 기피성을 나타낸다는 것이 롤즈의 주장이다.(롤즈는 위험기피성과 불확실성기피성을 구분하지 않지만 롤즈의 논증은 후자를 필요로 한다) 따라서 최소수혜자의 입장에서 판단해야 합리적이라는 것이다. 최소수혜자의 입장이 최대한 개선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롤즈의 사회적 성과 배분의 원칙이다. 달리 말하면 최소수혜자의 개선이 없

는 불평등은 용인될 수 없다는 것이다. 이것이 롤즈가 말하는 차등의 원칙(difference principle)이다.<sup>20)</sup> 이런 차등의 원칙은 정부의 소득재분배 기능을 필요로 하지만 그것이 지나쳐서 최소수혜자에게까지 피해를 야기하는 비효율을 야기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의미하기도 한다.

요컨대 롤즈는 원초적 입장에서 무지의 장막에 가려진 사람들에게 가장 합리적으로 인정되는 정의의 기본원칙을 우선순위에 따라 두 가지 세부 원칙으로 구분하여 제시하였다.

- (i) (Rawls, 1971, p.60) (평등한 권리의 원칙:) 각 개인은 모든 사람들이 동시에 누릴 수 있는 가장 포괄적인 기본적 자유에 대하여 균등한 권리를 누려야 한다.
- (ii) (Rawls, 1971, p.83) (a) (차등의 원칙:) 경제적 불평등은 최소수혜자(the least advantaged)에게 최상의 보상이 이루어지도록 한다는 전제 하에서 허용될 수 있고, (b) (기회평등의 원칙:) 그에 우선하여, 이러한 불평등이 발생하는 사회적 위치, 역할, 직업, 지위에 대한 기회는 모든 사람들에게 공정하게 보장되어야 한다.

롤즈의 정의의 기본원칙에서 차등의 원칙이 가장 주목 받고 있지만 평등한 권리의 원칙과 기회평등의 원칙이 차등의 원칙에 우선한다는 점에 주목해야 한다. 하사이의 결론과 마찬가지로 롤즈의 정의의 원칙 역시 효율성을 포괄한다. 비효율적인 배분은 최소수혜자의 개선의 여지를 남기므로 차등의 원칙에 반하는 것이다. 롤즈의 정의의 원칙이 공리주의와 대조되는 점은 사회적 성과 배분에서 최소수혜자를 지표로 삼는다는 점이다. 바로 이 차이가 롤즈의 정의론이 평등주의적인 함의를 갖게 만드는 핵심요소라 할 수 있다.

사회 구성원들은 그들이 원하건 원치 않건 어떤 형태로든 사회적 성과를 도출하기 위해 협력하고 있다. 분업과 교역이 발달한 현대 자본주의에서 이러한 협력의 규모와 범위는 헤아릴 수 없을 정도로 크고 넓다. 정의론의 관점에서 볼 때, 자본주의건 사회주의건, 한 회사의 영업이익은 그 회사의 성과만이 아니라 사회적 협력의 성과의 일부인 것이다. 공리주의와 롤즈의 정의론 모두 국가라는 거대한 협력체를 통해 얻어진 사회적 성과의 배분에 대한 공정성의 원칙과 척도를 제시하고 있다. 그리고 시장경제, 공공부문, 교육, 의료, 복지제도 등 사회의 기본구조가 공정한 배분의 실현을 결정한다. 롤즈의 평등주의적 분배원칙은 보다 강력한 국가의 재분배를 실현하는 사회의 기본구조를 필요로 할 것이다. 현대의 복지국가 자본주의를 구성하는 사회의 기본구조는 하나의 거대한 협력이익의 공유제라 할 수 있다.

아담 스미스는 『국부론』(Smith1776)에서 현려에 따라 사적이익을 추구하는 개개인의 활동이 빚어내는 공공의 이익의 놀라운 성과에 대해 이렇게 말한다.

---

20) 롤즈는 이에 대한 가장 상세하고 비교적 정형화된 논증을 그의 정의론 제26절에서 제시하고 있다. 그러나 그의 논증은 최소수혜자를 기준으로한 정의의 원칙이 왜 공리주의 보다 설득력이 있는가에 대한 개연성 있는 설명 정도라고 보는 것이 적절할 것으로 보인다. 롤즈의 무지의 장막과 합리성에 따른 필연적 귀결이라는 것을 입증하는 것은 아니다. 경제학의 의사결정이론(decision theory)에서 불확실성 기피(uncertainty aversion)와 모호성(ambiguity)에 대한 연구성과들은 불확실성이 하나의 확률분포로 주어지지 않을 경우, 합리적 의사결정자는, 롤즈가 주장하는 것과 유사하게 “최악의 가능성”에 기초하여 결정하게 된다는 것을 증명하고 있다.

각 개인은 공익을 증진하도록 기여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얼마나 자신이 공익에 기여하는지 알지도 못한다. 그가 의도하는 것은 단지 자신의 안전일 뿐이다. 일하여 얻은 결과가 최고의 가치를 가지도록 성실히 노력하여 그가 바라는 바는 오직 자기 자신의 이익이다. 그는 [시장에서] 보이지 않는 손에 이끌려 자신이 의도하지 않은 어떤 [공익의] 목적을 달성하게 되는 것이다.<sup>21)</sup> (Smith 1776, Book IV, Chapter II)

현대경제학의 중요한 성과 중 하나는 이런 아담 스미스의 주장을 실증과학의 언어로 논증하는 것이다.<sup>22)</sup> 시장에서 경제주체들 간의 힘의 불균형이 존재하는 경우들을 볼 수 있다. 공급자가 시장지배력을 행사할 수 있는 시장에서 독과점과 가격차별의 문제가 발생한다. 기업 간 힘의 불균형으로 진입장벽이 만들어지면 경쟁이 제한되고 비효율이 발생한다. 현대경제학에서 이상적인 시장경제는 이런 힘의 불균형이 존재하지 않는 상태를 의미한다. 모든 경제주체들 간에 힘의 균형이 이루어져 소비자, 노동자, 기업 등 어떤 경제주체도 시장지배력을 행사할 수 없는 시장을 완전경쟁시장이라 말한다. 이런 이상적인 시장경제에서 이루어지는 거래의 결과는 항상 효율적이라는 것이 신고전학과 주류 경제이론의 결론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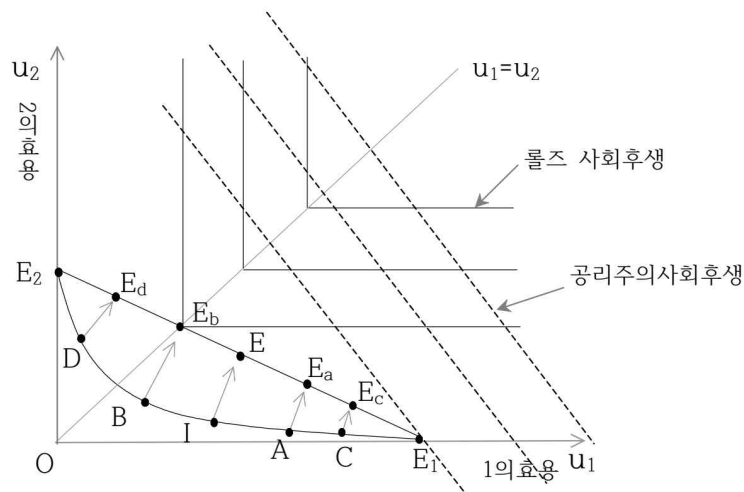
후생경제학의 제1기본정리. 모든 재화의 생산과 소비의 외부성이 없고 완전한 정보가 주어질 때, 완전경쟁시장에서 경제주체들이 사적 이익(소비자의 후생, 기업의 이윤)을 추구하는 거래의 결과(자원배분)는 항상 효율적이다.

이 정리는 한편으로는 시장경제라는 제도가 가지는 효율성이라는 장점을 말해주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이런 장점을 위해 필요한 조건을 제시해주기도 한다. 또 얼마나 다양한 효율적인 결과들이 존재하는지도 이 정리로 부터 알 수 있다. 왜냐하면 사람들의 부와 소득 불평등에 따라 시장은 다양한 결과를 만들어 내기 때문이다. 불평등도가 가장 낮은 것에서 가장 높은 것에 이르기까지 넓은 스펙트럼 상의 무수한 효율적인 결과들이 존재하는 것이다. 이 중 어떤 결과가 시장에서 얻어지는가는 출발점의 불평등도에 의해 결정된다. 정의의 원칙이 효율성뿐이라면 이 무수한 결과들 모두 동등하게 선한 것이 된다. 여기에 동의할 사람은 극히 드물 것이다.

공정한 사회계약으로 얻어지는 정의의 원칙은 효율성 이외에 효율적인 자원배분에 대한 선의 우열을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을 제시한다. 이를 공정성이라 부르며 공리주의에서는 개인의 이익의 총합이 공정성의 기준이 되고 롤즈의 정의론에서는 최소수혜자의 이익(혹은 롤즈가 말하는 기초재의 지표, index of primary goods)이 공정성의 기준이 된다.

21) 이만우·주병기(2015) p.92의 번역을 재인용.

22) 후생경제학의 기본정리는 Arrow(1951)에서 증명되었고 관련연구로 Arrow and Debreu(1954), Debreu(1959), Arrow and Hahn(1971) 참고.



시장경제에서 거래의 출발선에서 사람들이 소유하고 있는 소득, 자산, 노동력, 재능 등의 분포에 따라 다양한 출발점이 존재한다. <그림 1>에서 E1, A, B, C, D, I, E2를 지나는 곡선은 이런 다양한 출발점을 나타낸다. 각 점의 화살표는 시장거래를 통해 얻어지는 효율적인 결과의 위치를 나타낸다. 가령 I에서 시작된 거래는 두 사람 모두에 이익이 되는 E와 같은 효율적인 결과로 이어진다. 후생경제학의 제1기본정리는 시장에서 얻어지는 결과가 E1과 E2를 잇는 선분 상에 있다는 것만을 말해줄 뿐이다. 출발점이 어딘가에 따라 지극히 불평등한 E1, E2, Ec, Ed 같은 결과가 발생할 수도 있고 두 사람의 후생이 동일해 평등한 Eb와 같은 결과가 발생할 수도 있다. 따라서 시장경제는 항상 효율적인 결과를 얻게 하지만, 공정할 수도 불공정할 수도 있다. 공정성이 추가된다면 무수한 효율적인 결과들 중에서 더 선한 것을 구분해낼 수 있다.

후생경제학의 제1기본정리는 시장경제가 효율성을 달성하기 위해 유용한 제도라는 것을 보여준다. 공정성을 달성하기 위해서도 시장경제가 유용한가? 이에 답하는 것 역시 신고전학파 경제이론의 주요과제이다.

후생경제학의 제2기본정리: 모든 재화의 생산과 소비의 외부성이 없고 완전한 정보가 주어지는 경제를 가정할 때, 소비자의 복지와 생산기술에 대한 통상적인 기술적 가정이 추가되면,<sup>23)</sup> 어떤 효율적인 결과도 적당한 정액세를 부과함으로써 완전경쟁시장에서 사적 이익을 추구하는 거래의 결과가 되게 만들 수 있다.

〈그림 1〉의 I와 같은 출발점에서 거래가 이루어진다면 결과는 E가 된다. 이 결과는 롤즈의 사회후생함수의 관점에서 최선의 결과라 할 수 없다. 왜냐하면 E1과 E2의 직선상에서 E의

23) 소비자 선호의 볼록성과 기업 생산기술의 볼록성이 통상적인 가정이다. 볼록성은 위험기피성이나 소비가 증가할수록 소비를 더해서 얻는 만족은 줄어든다는 자연스런 개인후생(복지)의 특성과 관련된 수리적 가정이다. 보다 자세한 설명은 대부분의 경제학론 혹은 미시경제학 교과서에 설명되어 있다.

좌측으로 이동하면 두 사람 중 (E에서) 효용이 더 낮은 2의 효용이 더 높아질 수 있기 때문이다. 롤즈의 사회후생함수를 이용한 최선의 결과는 두 사람의 효용이 동일하면서 동시에 효율적인 E<sub>b</sub>이다. 이런 결과를 달성하려면 부유한 1에게 세금을 부과하고 그 세수로 가난한 2의 소득을 보조하여 출발점 I를 B로 이동시키면 된다. 즉 출발점에서의 불평등을 과세를 통해 해소하게 되면 롤즈 사회후생의 관점에서 최선의 공정한 결과가 시장에서 이루어진다는 것이다. 공리주의의 관점에서 효용을 합을 높이려면 E<sub>1</sub>과 E<sub>2</sub>의 직선상에서 E보다 오른편의 결과를 얻어야 한다. 따라서 이 경우 재분배의 방향은 반대로 이루어져야 한다.

여기서 주목할 점은 후생경제학의 제2기본정리는 어떤 공정성의 기준에도 적용될 수 있다는 사실이다. 적절한 공정성의 기준을 적용하여 공정하고 효율적인 배분의 목표가 정해지면 후생경제학의 제2기본정리에 따라 그 목표를 시장에서 달성할 수 있게 하는 정액세(lump-sum tax)를 부과하기만 하면 된다.<sup>24)</sup> 무엇을 공정성의 기준으로 삼는가는 주관적이고 정치적인 문제이다. 그 기준이 무엇이든 이 정리를 적용할 수 있다는 것이다.<sup>25)</sup>

후생경제학의 제1기본정리와 제2기본정리는 시장경제가 효율성과 공정성의 관점 모두에서 유용한 제도라는 것을 말해준다. 시장경제가 비록 개인의 사적 이익을 위한 거래의 자유를 보장하고 있지만 바로 그런 특성 때문에 효율성과 공정성으로 이루어진 정의의 원칙을 달성할 수 있다는 것이다. 여기서 주목해야 할 점은 이런 좋은 결과가 자연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이다. 두 정리는 시장경제가 효율성과 공정성이라는 정의의 원칙을 실현하기 위해 필요한 조건들을 제시하고 있다. 바로 이 조건들이 성립하도록 시장경제를 관리하거나 보완하지 않는다면 시장경제는 정의를 실현할 수 없다는 것이 이 두 정리가 함의하는 바이기도 하다.

시장경제는 그 자체가 하나의 거대한 공적인 제도라 할 수 있다. 물론 다른 어떤 공적인 제도보다 개인과 기업의 경제활동의 자유를 보장하는 분권화된 의사결정 체계를 가진다. 그래서 사람들은 이를 공적인 제도라 인식하지 않는 경향이 있고 자연발생적인 것으로 착각하기도 한다. 그러나 시장경제의 경제활동의 자유는 소유권의 확정과 계약의 이행을 강제하고 공정한 거래를 감독하며 처벌하는 공공부문의 역할에 의해 보장된다. 현대국가의 가장 중요한 역할은 후생경제학의 두 기본정리에 따라 시장경제라는 거대한 제도가 공정하고 효율적으로 작동하여 분배정의에 대한 사회적 총의를 실현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시장경제의 효율성이 실현되려면 모든 경제주체들 간의 힘의 균형이 이루어지도록 시장을 감시·감독하고 관리하는 공공부문의 역할이 필요하다. 이것이 완전경쟁시장을 가정하는 후생경제학의 제1기본정리의 시사점이다. 따라서 독과점 행위를 감시하고 공정거래를 감독하여 경제적 강자와 약자의 동반성장을 유도하는 공공부문의 역할이 필수적이다. 또한 노동과 자본의 힘의 균형을 위해, 노동기본권을 보장하고 이를 침해하는 부당노동행위 그리고 다른 법규를 위반하여 노동자들에게 부당한 노동을 강요하는 행위 등을 감시하고 처벌하는 공공

24) 과세의 왜곡에 의한 비효율성이 없는 정액세를 가정하고 있다.

25) 이와 관련된 자세한 논증은 Varian(1974, 1975) 참고. Ju and Moreno-Ternero(2017, 2018)은 완전경쟁시장보다 일반적인 시장에서 유사한 결론을 얻을 뿐만 아니라 재산권의 분쟁상황에서 평등한 재산권 배분이 유일하게 공정한 분쟁해결 방식이라는 결론을 얻는다.

부문의 역할도 필수적이다. 이러한 노동시장의 공정한 질서를 확립하는 것이 노동과 자본의 동반성장의 과제이다. 이렇게 노동과 자본 간, 기업 간 그리고 수요자와 공급자 간의 힘의 균형이 유지될 때, 시장경제가 효율적으로 작동하고 대중소기업 간, 부문 간, 경제주체 간 동반성장의 토대가 만들어진다.

전통적으로 재정학에서 가장 중요하게 다루는 정부와 공공부문의 역할은, 시장의 가격기구를 통한 자원배분이 비효율적인 시장실패의 영역이다. 바로 후생경제학의 제1기본정리에서 배제되었던 공공재, 외부성, 불완전 정보, 자연독점 등이 존재하는 경우들을 말한다. 국민소득이 높아질수록 공공재의 특성과 외부성이 존재하는 교육, 보건의료, 자연환경, 공공안전 등에 대한 수요는 더욱 커지고 그만큼 공공부문의 역할도 커지게 된다. 특히 교육과 의료는 롤즈의 기회평등의 원칙이 실현되도록 하는 가장 중요한 기초재이다. 이는 인적역량과 건강이 공평한 경제활동의 기회를 확보하기 위해 필수적이기 때문이다. 이러한 기초재의 평등한 접근성을 보장하는 공공의 역할을 통해 모든 구성원들이 계층, 성별, 지역, 인종, 종교 등 사회경제적 배경의 제약 혹은 한계를 극복하고 동반성장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될 때 기회평등의 원칙이 실현될 수 있다.

시장경제를 통해 공정한 분배를 실현하려면 국가와 공공부문의 소득재분배 기능이 필요하다는 것이 후생경제학의 제2기본정리에서 얻는 시사점이다. 시장에서 발생하는 과도한 불평등을 해소하는 적절한 소득재분배를 위해서 공평한 과세 그리고 복지와 사회안전망을 제공하는 공공부문의 역할이 필요하다. 이처럼 공정한 분배를 실현하는 공공부문의 역할은 복지국가 자본주의가 발전하면서 더욱 강조되었고 이를 위한 재정규모 역시 지속적으로 확대되었다. 이처럼 두터운 복지와 사회안전망은, 모든 사회계층, 노동과 자본, 농촌과 도시, 그리고 모든 부문이 사회적 성과를 공유하고 동반성장할 수 있게 하는 기본구조로 진화하고 있다.

최근 경제개발협력기구(OECD), 국제통화기금(IMF), 세계은행 등 주요 국제기구들이 경제성장을 지속하기 위해 정부의 재분배기능을 강화하고 복지와 사회안전망을 확충해야 한다는 ‘포용적 성장(inclusive growth) 전략’을 강조하기 시작했고 실제 대부분의 주요 선진국들이 채택하는 정책 기조로 자리 잡았다.<sup>26)</sup> 소득 불평등이 완화될 때 교육을 통한 양질의 인적자본의 축적, 활발한 계층이동, 그리고 수요기반의 강화 등 경제성장에 유리한 조건들이 형성된다는 그동안 학계에서 축적된 수많은 연구성과를 반영한 것이다. 따라서 동반성장은 공정한 분배를 위해서만이 아니라 경제성장을 지속하기 위한 전략으로도 유용하다는 것이 경제학계에서도 정설로 자리 잡았다고 볼 수 있다.

## V. ESG(Environmental, Social and Governance)와 동반성장

Friedman(1970) 교수는<sup>27)</sup> 기업에 대한 사회적 책임 요구는 시장에서의 의사결정과는 다른

26) OECD(2014, 2015).

27) Milton Friedman, Responsibility of business is to increase its profits, New York Times Sep. 13, 1970.

<https://www.nytimes.com/1970/09/13/archives/a-friedman-doctrine-the-social-responsibility-of-business-is-to.html>



정치적이고 더 나아가 사회주의적 정책개입이라고 지적하고<sup>28)</sup> 기업이 외부성을 내재화할 이유가 없으며 기업의 경제적 선택은 윤리적 행동과 분리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만일 기업에게 사회적 책임이 있다면 그것은 이윤을 극대화하는 것이라고 했다. 사적 재산에 기초한 자유로운 시장경제에서 어느 누구도 타인을 강제할 수 없고 사회는 개인의 집합체(society is a collection of individuals)이므로 사회적 가치 혹은 사회적 책임은 어떤 의미로도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프리드먼 교수의 1970년 논문은 1930년대 초 이후 전개되어 온 주주 중심 지배구조와 이해관계자 중심 지배구조 간의 논쟁구도에서 주주 중심 지배구조론을 적극적으로 옹호하는 지위를 유지해 왔다.

프리드먼 교수의 이러한 주장에 대해 최근 프리드먼 교수가 재직했던 시카고 대학의 Stigler Center<sup>29)</sup>는 시장이 완전경쟁적이지 않고 기업의 생산활동이 부정적 외부성을 초래하고 불확실성에 대한 완전한 계약이 불가능하므로 기업의 사회적 책임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외에도 Hart and Zingales(2017),<sup>30)</sup> Eugene Fama(2020)<sup>31)</sup> 등 역시 외부성을 해결하기 위한 목적의 ESG가 필요하다고 지적하였다.

ESG와 동반성장은 불가분의 관계를 갖는다. ESG가 추구하는 가치는 동반성장이고, 동반성장은 ESG를 통해 실현될 수 있다. ESG는 지구와 지구를 토대로 삶을 영위하는 우리 인간들이 직면한 위기가 무엇인지, 그리고 그 해결 방향이 무엇인지를 명확히 드러낸다. E는 기후위기의 심각성에 따른 것으로, 기업생산활동의 외부성(externality)을 내재화하고 에너지전환이 시급히 이뤄져야 한다는 점이 핵심이다. 기후 위기는 미래 인류사회의 지속가능성을 위협하는 것으로 심각한 세대간 불평등을 초래한다. S는 기업이 더 이상 이윤에만 얽매이지 말고 사회적 가치를 추구함으로써 good citizen으로서 책임과 역할을 다해야 한다는 것이다.

고대 이래로 철학이 담당해 오던 사회적 가치에 대한 논의에서 경제학이 철학의 자리를 대체하면서 소위 이윤을 중시하는 경제적 가치는 사회적 가치를 협소하게 만들어 버렸다. 하지만 경제적 가치가 없거나 적더라도 인간의 생존에 필수적인 것들이 있다. 예를 들면, 맑은 공기와 물이 그렇고, 아담 스미스가 역설한 도덕감정이 그렇다. Arrow(1963, 1974)가 지적한 바와 같이, 이윤의 원천이 되지 못하는 이들의 경제적 가치는 시장에서 거의 혹은 전혀 인정되지 못하지만 인간의 삶이 유지되고 건강한 사회공동체를 위해서는 절대적이다.

맑은 물과 공기가 사라진 이후에야 그 가치를 알게 된다면 그때는 이미 늦다. 소득양극화가 심화되어 더 이상 사회의 존립이 불가능한 때에 이르러서야 아담 스미스가 강조한 정의와 인혜의 가치를 알게 된다면 이 또한 그때는 이미 늦다. 지속가능한 삶을 영위하기 위해서는 shared value 즉 동반가치를 경제활동의 목적에 포함시켜야 하며, 이윤극대화 대신에 동반

28) the doctrine of “social responsibility” involves the acceptance of the socialist view that political mechanisms, not market mechanisms. Friedman(1970), 위 글.

29) Stigler Center, Friedman’s Principle, 50 years later (2020).

<https://www.promarket.org/wp-content/uploads/2020/11/Milton-Friedman-50-years-later-ebook.pdf>

30) Oliver Hart and Luigi Zingales, Companies should maximize shareholder welfare not market value, Journal of Law, Finance and Accounting (2017). 2: 247-274.

31) Eugene F. Fama, Market forces already address ESG issues and the issues raised by stakeholder capitalism, Promarket (2020).

후생극대화(shared value maximization)를 추구해야 한다. 이윤을 낳지 않으면 가치가 없다는 시장감정(market sentiments)을 넘어 동반가치를 실현하지 못하면 시장가치 또한 가치로서의 의미를 상실하게 된다는 도덕감정(moral sentiments)이 자리를 잡아야 한다.

도덕감정의 회복을 위해서는 사회를 구성하는 자연인과 기업의 노력뿐 아니라, 사회 전체가 동반성장을 위한 사회적 계약(social contract)을 추진해야 한다. 사회계약추진위원회를 구성하여 숙의민주주의(Deliberative democracy) 방식에 따라 사회적 대타협을 위한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이것이 ESG의 G가 주장하는 핵심이다. 흔히들 G를 corporate governance 즉 기업지배구조로 이해하는데 이는 G의 일부입니다. 물론 매우 중요한 요소입니다만 기업 차원으로만 제한되는 것은 아니다.

E와 S가 지향해야 할 가치라고 한다면, G는 E와 S를 실현하기 위해 필요한 제도다. 인간과 제도의 불완전함으로 인해 시장의 실패, 정부의 실패가 발생하듯이, E와 S를 실현하기 위한 제도로서의 G를 구축하는 것 역시 많은 시행착오가 따를 수 있다. E와 S를 추구하는 기업 중에는 훌륭한 성과를 내는 기업이 있지만 그렇지 못하고 실적이 부진함에 따라 CEO가 경질되는 사례도 있다. 또한 오랜 기간 동안 시장가치에 대한 집착과 이를 정당화하는 제도의 존재로 인하여 ESG를 추구하는 기업활동과 충돌이 빚어지기도 한다. 심지어는 ESG를 이용하여 겉보기에 그럴싸하게 포장하여 부실을 숨기는 ESG Washing 사례도 있다. 이름은 ESG 인베스트먼트이지만 그 투자대상이 사회적으로 바람직하지 못한 사례도 있다. 우리가 현재 직면한 전환기적 상황에서 ESG의 추구는 절박하지만 과도하게 서두르기보다는 하나하나 실체로서 성숙되고 완성해가는 길을 걸어야 한다. 그저 서둘러 될 문제가 아니다. ESG의 실천을 위한 명확한 기준을 설정해야 한다. 진정으로 ESG를 추구하는지 여부는 동반가치를 존중하고 파트너기업과 동반성장을 위한 노력을 기울이는지 여부에 의해 판단될 수 있다. 각 기업이 파트너기업과 사회에 대한 자신의 외부성을 투명하게 공개하고 이를 해소하고자 노력하는 상생협력이 바로 ESG 성공의 관건이 될 것이다.

## Ⅵ. 동반성장의 의미와 맺음말

우리 경제의 주요 문제점 가운데 하나는 의사결정권한을 가진 자와 이해관계자 간에 편익과 비용의 분배가 심각하게 왜곡되어 있다는 점이다. 의사결정이 갖는 중요성은 말할 필요가 없지만 경제활동은 의사결정권한을 가진 자와 이해관계자 간의 공동의 노력이 없이는 불가능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사결정권한의 행사를 통하여 편익과 비용의 분배가 적정 혹은 공정하게 이루어지 않는다면 경제활동의 장기적인 지속성이 저해되는 부작용이 초래될 수 있다. 편익과 비용의 분배의 왜곡이 드러나는 것은 경제활동의 결과를 나누는 단계이지만, 사실 이러한 문제점은 경제활동의 초기 계약과정에서부터 배태된다.

경제활동은 편익과 동시에 외부성으로서 사회적 비용을 수반한다. 경제활동의 비용이 자기 안에서만 발생하는 경우는 거의 없으며 있더라도 예외적이다. 의사결정권자와 이해관계자 간 정보비대칭성이 심화되고 독점적 기제가 강화되면 편익은 주로 의사결정권한을 가진 기업 및 국가에게 집중되는 반면, 사회적 비용은 의사결정권한을 갖지 못한 소비자, 기업과 국가를 포함한 다수의 이해관계자에게 집중된다.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의 관계, 빅테크가

주도하는 디지털 환경은 이러한 문제점이 드러나는 주된 사례이다. 특히 빅테크가 주도하는 디지털 비즈니스는 사회적 비용을 플랫폼 양면시장 참여자에게 이전시켜 종래보다 더 심각한 외부성을 야기할 수도 있다.

의사결정권한을 가진 자에 의한 편익과 비용의 분배의 왜곡은 주로 외부성의 형태로 나타난다. 의사결정권자가 편익은 자신이 취하고 비용은 외부화시키는 것이다. “동반”은 외부성을 떠맡는 이해관계자가 다른 아닌 의사결정권자의 동반자라는 점을 드러냄으로써 외부성의 내재화가 이루어져야 하는 범위를 명확히 하는 데 유용하다. 외부성의 내재화는 동반관계의 유지를 위한 필수 요건이다. 동반의 관점에서 중소기업은 대기업 외부성 내재화의 대상에 포함되어야 하고, 양면시장 고객은 빅테크가 초래하는 외부성 내재화의 포함 대상이 되어야 한다. 그렇다면 내재화는 어떤 방식으로 어느 수준에서 이루어져야 하는가? 앞으로 구체적인 연구가 이루어져야 할 사항이다.

동반관계는 내용적으로는 의사결정권한의 배분과 관련한 지배구조의 개선, 창출된 가치의 공유, 기업의 이윤추구와 윤리적 행동의 결합가능성 등과 관련되고, 대상으로는 국가와 국가, 기업과 기업, 기업과 소비자, 소상공인과 지역경제, 근로자와 근로자, 주주와 비주주, 인간과 자연(현 세대와 미래 세대) 등의 관계를 포함한다.

경제적 불평등의 심화와 양극화를 해소하기 위한 시대적 요청이 바로 동반성장이다. 동반성장은 신자유주의와 달리 개개인을 상호작용의 관계를 갖는 공동체 사회 구성원으로 본다. 그리고 그들 사이의 관계를 ‘동반자’ 관계로 설정한다. 동반자 관계란 서로가 서로에게 대등한 관계로 함께 살아가는 관계다. 그래서 개인이 구현할 수 있는 행복과 자유는 관계를 맺고 있는 사람들이 누리고 있는 행복과 자유, 그리고 공동체 사회에 구현된 행복과 자유에 의해 영향을 받는다. 아담 스미스의 정의와 인혜의 덕은 동반성장의 기둥이자 지붕이다. 동반성장은 이 두 가지 덕에 기대어 승자독식을 지양하고 상생 협력하는 사회를 지향한다.

동반성장은 아탈리(J. Attali)가 말한 이타적 이기주의를 기반으로, 개인과 사회를 분리하지 않고 개인의 행복과 공동체 구성원들의 행복, 나아가 공동체 사회의 행복을 함께 추구한다. 그것이 함께 성장하고 더불어 나누는 가치다. 이러한 가치를 바탕으로 사회제도·법·정책이 만들어지고 구현될 때 개인과 개인, 개인과 사회가 서로 행복을 증진하는 동반성장 사회로 갈 것이다. 동반성장은 ‘더불어 성장하고 함께 나누자’라는 것으로 공동체사회 구성원인 정부, 기업, 개인의 행동 기준인 동시에 지속 가능한 공동체 사회의 가치이며, 사회의 작동원리다.

마지막으로, 이 글은 주로 동반성장의 철학적 기초에 대한 논의를 담았다. 이 글을 통해 동반성장이 왜 필요하고 중요한지에 대한 이해가 이루어졌기를 기대한다. 다만,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동반성장을 이룰 수 있는가에 대한 물음 역시 대단히 중요하나 글의 구성상 이 물음에 대한 논의는 다른 기회로 미루고자 한다.

## 참고문헌

- 기획재정부. 보도참고자료. 디지털세 필라2 모델규정 공개. 2021.12.20.
- 김동연, 기부활성화를 위한 세법상 지원제도 검토. 한국경제연구원. 2019.
- 김자봉, 금산분리의 법리와 경제분석, 박영사. 2021.11.
- 왕승혜·최승필, 글로벌 법제논의의 현황과 전망, 한국법제연구원, 2018
- 정운찬, 동반성장이 시대정신이다. 동반성장포럼. 2022.1.
- 정운찬, 한국경제 동반성장 자본주의 정신, 파람북 (2021).
- 정운찬, 동반성장과 경제민주화, 2019.
- 조일현·이재석 2020, “국제 신재생에너지 정책변화 및 시장분석”, KEEI 보고서 20-27
- 최승필, 법의 균형, 헤이북스, 2021
- 한수웅, 헌법학, 법문사, 2019
- 허영, 헌법이론과 헌법, 박영사, 2021
- 홍정민,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인앱결제 방지법), 2020.11.12.
- Adam Smith, *The Wealth of Nations*, Oxford Univ. (1776. reprinted 1976)
- Andrew Skinner, *Analytical Introduction*, in Adam Smith, *The Wealth of Nations*, Penguin Classics (1776. reprinted 1999).
- Amartya Sen, *Rational Fools: A critique of the behavioral foundations of economic theory*, *Philosophy and Public Affairs*, Vol. 6(4) (1977).
- Amartya Sen, *Philosophy and Economic Theory*, edited by Frank Hahn and Martin Hollis, Oxford Univ. Press (1979).
- Bertrand Russell, Chapter 14: *The Value of Philosophy*, *The Problems of Philosophy* (1912)
- Kenneth Arrow, *The limits of organizations*, Fels Lecture of Nobel laureate, Norton (1974).
- Kenneth Arrow, *Social Choice and Individual Values*, 2nd ed. Yale (1963).
- Biung-Ghi Ju, Min Kim, Suyi Kim, Juan D. Moreno-Ternero, “Fair international protocols for the abatement of GHG emissions,” *Energy Economics*, Volume 94, 2021, 105091, ISSN 0140-9883, <https://doi.org/10.1016/j.eneco.2020.105091>.
- Eugene F. Fama, *Market forces already address ESG issues and the issues raised by stakeholder capitalism*, Promarket (2020).
- Frankfurt School (2020), “Global Trends in Renewable Energy Investment 2020.”
- Milton Friedman, *Responsibility of business is to increase its profits*, New York Times Sep. 13, 1970.
- OECD, *Tax Challenge Arising from Digitalisation-Interim Report* 2018.3
- OECD, *The framework for policy action on inclusive growth*. 2018.
- Oliver Hart and Luigi Zingales, *Companies should maximize shareholder welfare not market value*, *Journal of Law, Finance and Accounting* (2017).
- Paul Krugman, *The myth of Asia’s miracle*, *Foreign Affairs* Vol. 73 (6), Dec. 1994. pp. 62-78.
- Stigler Center, *Friedman’s Principle, 50 years later* (2020).
- Thomas Hobbes, *Leviathan: The matter, forme, and power of commonwealth ecclesiasticall and civil* (1651)